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2026. 09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CONTENTS

|     |   |
|-----|---|
| 제출문 | 4 |
|-----|---|

---

## PART

# 1

## 요약

5

---

## PART

# 2

## 과업의 개요

|            |    |
|------------|----|
| (1) 과업의 배경 | 10 |
| (2) 과업의 목적 | 13 |

---

## PART

# 3

## 국내외 주요국의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                                                           |    |
|-----------------------------------------------------------|----|
| (1)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개요                                     | 16 |
| (2) 유럽의 동향                                                | 16 |
| 1) 제품의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 지침(Directive (EU) 2024/1799)     | 16 |
| 2)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 | 18 |
| 3)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 18 |
| 4) EU 회원국간 이행 사례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19 |
| (3) 미국의 동향                                                | 21 |
| 1) 뉴욕주 입법 사례                                              | 22 |
| 2) 캘리포니아주                                                 | 23 |
| 3) 콜로라도주                                                  | 24 |
| (4) 한국의 동향                                                | 24 |
| 1) 제품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소비자                                  | 25 |
| 2) 한국 내 수리권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 26 |

---

PART

4

## 국내외 민간·시민사회 수리권 실천 동향

|                                                      |    |
|------------------------------------------------------|----|
| (1) 국외 사례                                            | 30 |
| 1)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 31 |
| 2) 아이픽스잇(iFixit)                                     | 34 |
| (2) 국내 사례                                            | 35 |
| 1) 민간·시민사회 주도 수리권 실천 사례                              | 36 |
| 2) 지방자치단체 주도 수리권 실천 사례                               | 38 |

---

PART

5

## 제주도 수리권 정책 및 실천 동향

|                        |    |
|------------------------|----|
| (1) 제주도민 수리권 인식 조사 결과  | 42 |
| (2) 제주도 수리권 실천 동향      | 43 |
| (3) 민선9기 제주도의 수리권 정책방향 | 45 |

---

PART

6

## 제주형 수리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    |
|---------------------|----|
| (1) 수리 공간 등 인프라의 구축 | 50 |
| (2) 기술자 등 인력 운영 체계  | 51 |
| (3) 수리 정보 축적과 공유    | 52 |
| (4) 수리권 조례 제정       | 52 |

|      |    |
|------|----|
| 참고문헌 | 56 |
|------|----|

# 제 출 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귀하

본 보고서를 「2026년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영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 09.

|          |                  |
|----------|------------------|
| 과업수행 단체명 |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
| 연구책임자    | 김 정 도            |
| 참여연구원    | 현 승 우            |

## 연구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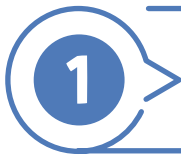
|       |                  |
|-------|------------------|
| 박 경 호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
| 류 은 화 | 제주시새활용센터 센터장     |
| 문 해 리 | 제주시새활용센터 선임매니저   |

PART

1

요약





## 요약

전 세계 전자폐기물은 2022년 6,200만 톤에서 2030년 8,2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재활용률은 22.3%에 불과하며, 자원 채굴과 폐기 과정의 피해(인도네시아 니켈 채굴, 가나 아그보그블로시 매립지 등)는 개발도상국에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대응해 EU가 2024년 수리권 지침을 채택하며 국제적으로 수리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대기업 외 중소·수입 가전의 도내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리 부품 재고 불안정과 육지 발송 부담으로 조기 폐기가 촉진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형 수리권 모델 정립과 관련 정책·조례 개정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2024년 「수리권 지침(2024/1799)」이 2026년 7월 31일부로 회원국 국내법 전환을 의무화했으며, 핵심은 ①법적 보증 12개월 연장 ②제조사 수리 의무화 ③유럽수리정보양식(ERIF) 제공 ④부품 페어링·소프트웨어 잠금 금지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설계 단계부터 수리 가능성을 규율하며, 「디지털 제품 여권(DPP)」 운영을 위한 중앙 레지스트리가 2026년 7월 구축되었으며, 향후 제품군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와 포함 정보가 구체화된다. 독일은 수리 가능성을 민법상 하자 판단 요건으로 명문화했고, 오스트리아는 「기기 구출자 프리미엄」으로 수리비 50%(최대 130유로)를 현금 지원하며, 프랑스는 「수리가능성 지수」「지속가능성 지수」로 세계 최초의 법정 표시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 정책이 정권 교체로 약화되었으나(2025년 바이든 행정명령 폐지), 주 단위 입법이 확산 중이다. 뉴욕(2023년 최초 시행), 캘리포니아(SB 244, 가장 광범위한 적용), 콜로라도(부품 페어링 제한) 등이 대표적이며, 2026년 기준 미국 인구의 약 25.75%가 수리권법 적용을 받는다. 한국은 공식 서비스센터 인프라는 우수하나 정보·부품 독점 해소 논의는 초기 단계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가 제조사의 수리 노력 의무를 규정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국회 발의 법안은 모두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도(광역 유일)를 비롯해 6개 지자체 조례로만 다뤄지고 있다.

민간·시민사회 실천은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발 「리페어 카페」(50개국 3,500여 거점), 미국의 「픽스 잇 클리닉」, 정보 인프라 제공자 「아이픽스잇(iFixit)」 등이 자가 수리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며, 재난 대응·사회통합 등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알맹상점(제로웨이스트)에서 파생된 ‘수리상점 골손’, 서울환경연합의 수리업체 아카이브, 인천 남동구의 공공 장난감 수리센터(2019년, 국내 최초 직영 모델), 밀양 ‘누구나수선소’(비수도권 유일의 국제 리페어카페 등록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새활용센터의 ‘수리수리다수리마을’ 프로그램이 사실상 도내 유일한 수리권 실천 거점이다. 센터 자체 인식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91%가 수리 경험이 있고 93%가 수리 가능성이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나, 46%는 육지로 제품을 보낸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는 서비스 센터 부재와 독립 수리업체 부족이다. 2026년 위성곤 도정의 100대 정책과제(74번)에 「(가칭)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 제정이 처음으로 명시되어, 2019년 압축쓰레기 사태 이후 강화되어 온 자원순환 정책이 수리권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인프라 측면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새활용센터를 거점으로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보조 거점화하여 수리공간·장비 보편적 접근을 확보하고, 민간 수리업체의 사회연대경제 조직화를 병행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력 측면에서 은퇴 시니어 기술인력의 상근 고용(노인일자리 연계)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병행하고, 제주도교육청·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 측면에서 아이픽스잇 등 해외 플랫폼이 다루지 않는 국내·중국산 제품 수리정보 DB를 새활용센터 중심으로 자체 구축해야 한다.

넷째, 조례 측면에서 경기도 조례를 벤치마킹하되 도지사 책무·재정지원 의무·거점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제조사 정보공개 협력을 선언적으로나마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

PART

2

## 과업의 개요

---

- (1) 과업의 배경
- (2) 과업의 목적

## 2

## 과업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시장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자원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 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I)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새로운 전자제품의 생산과 AI 데이터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24년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배출된 전자폐기물은 6,200만 톤이며, 매년 260만 톤씩 증가해 2030년에는 8,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적절하게 수거되어 재활용된 비율은 22.3%에 불과하며,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구리, 금 등 천연자원의 가치는 620억 달러에 이른다. 전자폐기물의 발생 속도가 재활용 속도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실정이다.<sup>1)</sup> AI 전환에 따른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발생할 전자폐기물의 잠재적 양을 연구한 결과, 약 5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sup>2)</sup>

이처럼 막대한 전자제품과 메모리 반도체의 소비 및 폐기는 근본적으로 대규모 자원 채굴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자원 채굴에서 파생되는 사회·환경적 피해를 채굴이 이뤄지는 지역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채굴 및 제련 과정을 보면, 산림 훼손, 수질 오염, 토지권 침해와 노동권 훼손 등의 피해를 매장 지역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다. 주요 광물 매장지는 물 부족 지역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토착민이 수 세대에 걸쳐 살아온 터전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채굴된 광물은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활용되어 혜택을 주지만, 정작 채굴 국가에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흔만 남긴다.<sup>3)</sup>

1)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2024). The Global E-waste Monitor 2024.

2) 이병구. (2024. 10. 29.). 전세계 열광 생성형AI의 그늘...“전자 폐기물 수백만 톤 늘어”. 동아사이언스.

3) 김혜린. (2026. 4. 9.). AI의 시작은 채굴이다. 프레시안.



그림 1. 광산 개발로 상당 부분이 훼손된 인도네시아 동부 할마헤라 지역의 작은 섬 전경. 사진: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2026)

폐기물 처리 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가나의 아그보그블로시다. 아그보그블로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규모 비공식 전자폐기물 처리 거점이다. 2021년 기존 스크랩야드가 철거된 이후에도 비공식 전자폐기물 수집·해체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버너 보이즈(Burner Boys)’라 불리는 이들이며, 이들이 폐기물에서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플라스틱 부품을 무분별하게 소각하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sup>4)</sup> 이곳에 쌓이는 전자폐기물은 대부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서아프리카로 수출된 전자폐기물로 여러 경로를 거쳐 가나 아그보그블로시로 유입된다. 한국 역시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로서 폐기물 발생에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추출된 구리 등의 금속이 한국의 산업 공급망으로 다시 유입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sup>5)</sup>

지구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폭발적인 전자제품 소비와 폐기물 증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다. 결국 고장 나거나 성능이 저하된 제품을 쉽게 폐기하는 문화를 넘어, 고쳐서 더 오래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활용 속도가 폐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즉,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는 단순한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4) 박은경. (2025. 12. 27.). 검은 연기 속 ‘현대판 금광’...가나의 ‘버너 보이즈’. 경향신문.

5) Peter C. Little. (2021). Burning Matters: Life, Labor, and E-Waste Pyropolitics in Ghana. Oxford University Press.



그림 2. 가나 아크라 아그보그블로시의 비공식 전자폐기물·스크랩 처리 지역. 사진:ISTOCK Images.

이러한 국제적 위기의식은 결국 2024년 유럽연합(EU)의 ‘수리할 권리’ 지침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제조업체에 수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전자제품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시민사회의 수리권 보장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수리권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기업 제품은 그나마 수리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 가전이나 수입 저가 가전의 경우 도내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한적인 수리 접근성은 결국 도내 전자폐기물 발생량을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녹색연합이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서도 소형 가전제품일수록 정상적인 수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sup>6)</sup>

더욱이 제주는 고장 시 필요한 수리 부품의 도내 재고가 불안정하며, 도내 수리가 어려워 제품을 육지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 노력이 소모된다. 이는 소비자가 결국 수리를 포기하고 제품을 조기 폐기하거나 가정 내에 장기 방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주의 관련 정책 및 조례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수리권 입법 동향 및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내 논의 지형을 점검하였다. 특히 민간과 시민사회의 그간의 활동과 제주 지역 사례를 심층 검토함으로써, ‘제주형 수리권 보장’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6) 녹색연합. (2023).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2) 과업의 목적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악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초래하며, 자원 절약과 폐자원 순환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up>7)</sup>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품을 수리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를 늦추는 것은 자원 절약의 가장 기본 전제이자, 순환 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다.

무엇보다 제주도는 한정된 환경 수용력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속적인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런 배경으로 폐기물 저감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매우 높다. 섬이라는 한계로 폐기물 처리가 제한적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주의 자원순환 정책은 타 지자체보다 한층 더 선도적인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 규모와 생활권역 면적은 새로운 수리권 모델을 시험하고 안착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새활용센터’와 같이 수리권 정책을 매개하고 실무를 뒷받침할 관계 기관과 인프라도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수리권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공식적인 수리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과거 지역 내 수리를 담당하던 전파사 등 민간 사설 수리 영역마저 급격히 쇠퇴하였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수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대체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서 제주형 수리권 모델의 필요성을 정립하고 도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수리권’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

PART

# 3

## 국내외 주요국의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

- (1)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개요
- (2) 유럽의 동향
- (3) 미국의 동향
- (4) 한국의 동향

### 3

## 국내외 주요국의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 (1) 수리권 입법 및 정책 동향 개요

유럽연합(EU)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이후, 2020년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수리권(Right to Repair)’ 논의를 구체화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24년 6월 13일 채택되어 7월 30일 발효된 「제품의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 지침(Directive (EU) 2024/1799)」(이하 수리권 지침)은, 소비자가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수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수리권 지침은 2026년 7월 31일부로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적·법적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 및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Directive (EU) 2024/825)」에 관한 지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도 주 단위로 개별적인 수리권 법안 통과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우수한 수준의 공식 서비스센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설 수리 활성화나 제조사의 정보·부품 독점 해소 측면의 논의가 입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활발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수리권은 일부 지자체와 민간 영역에서 다뤄질 뿐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은 제시되지 못했다.

### (2) 유럽의 동향

#### 1) 제품의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 지침(Directive (EU) 2024/1799)

앞서 서술하였듯 2026년 7월 31일부터 EU 회원국에 본격 적용된 유럽의 수리권 체계는 제조사에게 포괄적인 사후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리권 지침은 기존의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771)」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교체보다 수리를 선택

하도록 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지침은 재사용·수리·재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새 제품 구매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권 지침은 크게 4가지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법적 보증의 확장 ▲제조사의 수리 의무화 ▲유럽 수리 정보 양식(ERIF) 제공 ▲부품 페어링 및 소프트웨어 잠금 금지 등이다.

먼저 법적 보증의 확장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 시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하면 법적 보증 기간이 1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수리 후 재고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제 수단을 결정하기 전에 수리권과 보증 연장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정보 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제조사의 수리 의무화다. 스마트폰, 태블릿, 세탁기, 냉장고 등 특정 제품군에 대해 제조사는 보증 기간 종료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합리적인 가격이란 소비자가 수리를 포기하고 교체를 선택하게 유도할 만큼 비싸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사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어서 유럽 수리 정보 양식(ERIF)의 제공이다. 수리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정보 양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경우 수리 조건·가격·소요 시간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양식에 기재된 수리 조건은 제공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하다.

끝으로 부품 페어링 및 소프트웨어 잠금 금지다. 제조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하여 제3자의 수리 행위를 방해하는 관행은 수리권 지침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제조사는 수리를 어렵게 하거나 수리 후 성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특정 부품을 기기 본체와 디지털 방식으로 결합하는 부품 페어링(part pairing) 행위가 주요 규제 대상이다.



그림 3. 암스테르담 소재 리페어 카페에서 수리 중인 자원봉사자 사진: Martin Waalboer 촬영, 리페어 카페 국제 재단 제공(2022).

## 2)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

수리권 지침이 사후 서비스 접근권에 집중한다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이하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의 설계 단계를 규율한다. 두 규범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수리권 지침이 시장 출시 이후의 의무를 다룬다면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 단계부터 수리 가능성을 설계 요건으로 내재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크게 3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설계 단계의 규제 ▲계획적 진부화 금지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연계이다.

ESPR은 향후 제품군별 위임법령을 통해 수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요건을 설정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 단계의 규제를 살펴보면, 제조사는 분해의 용이성, 부품의 교체 가능성, 범용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유럽 외 기업의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특히 스마트폰·태블릿은 별도 규정(Regulation (EU) 2023/1670)에 따라 이미 관련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전자·가전 제품군은 위임 규정을 통해 품목별로 순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계획적 진부화 금지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거나 특정 부품 교체를 방해하는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하는 행위, 특정 부품을 기기 본체와 디지털 방식으로 결합하여 제삼자의 수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수리권 지침의 부품 페어링 금지 조항과 맞물려 제조사의 독점적 사후 관리 구조를 양면에서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끝으로 DPP 연계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단순한 설계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DPP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DPP는 제품에 부여되는 디지털 식별 체계로, 제품군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재료 출처, 재생 원료 함량, 수리 이력, 부품 번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종료일 등 수리와 순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3)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sup>8)</sup>

수리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이다.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부품 구성, 수리 절차, 소프트웨어 지원 일정 등 핵심 기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독립 수리업체와 소비자의 수리 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해 왔다. DPP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로, 에코디자인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법적 근거를 둔다. EU는 2026년 7월 DPP 운영을 위한 중앙 레지

8) EU. (2024). Regulation 2024/1781, Arts. 12-13.

스트리를 구축했으며, 향후 제품군별 관련 법령에 따라 DPP 적용 범위와 포함 정보가 구체화된다.

DPP는 제품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디지털 식별 체계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핵심 정보를 QR 코드, NFC 태그, 또는 RFID 태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비자, 독립 수리업체, 규제 당국 등 이해관계자는 데이터 캐리어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의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DPP에 포함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품군별 관련 법령에 따라 DPP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에는 ▲원재료 출처 및 재생 원료 함량 ▲탄소 발자국 및 유해 물질 정보 ▲수리 및 해체 지침, 예비 부품 번호 ▲수리에 필요한 특수 도구 목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종료 예정일 ▲수리 이력 및 재활용 관련 정보 등이 있다.

DPP는 단순한 제품 정보 공시 수단을 넘어 수리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립 수리업체는 DPP 데이터를 활용해 수리 이력을 직접 기록하고 업데이트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독점하던 수리 정보 구조에 균열을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소비자로서는 구매 시점부터 해당 제품의 수리 용이성, 부품 수급 가능 기간, 소프트웨어 지원 종료일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계획적 진부화 금지 조항과 맞물려, 제조사가 정보를 은폐한 채 조기 교체를 유도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4) EU 회원국간 이행 사례

수리권 지침의 국내법 전환이 이행된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제 전통과 정책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이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아직 다수의 회원국이 국내법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 ① 독일

독일은 2026년 1월 15일 연방법무 및 소비자보호부(BMJV)가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25일 연방 내각이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리권 지침의 국내법 전환 절차를 본격화하였다.<sup>9)</sup> 이후 법안은 6월 25일 연방의회(Bundestag)를, 7월 연방참사원(Bundesrat)을 통과했다.<sup>10)</sup>

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2026. 3. 25.). Ein neues Recht auf Reparatur: Gesetzentwurf zur Stärkung von Verbraucherrechten beschlossen.

10) Deutscher Bundestag. (2026. 6. 25.). Bundestag stimmt „Recht-auf-Reparatur- Richtlinie“ zu., Bundesrat. (2026. 7. 10.). Recht auf Reparatur passiert den Bundesrat.

독일 이행 방식의 핵심은 수리 가능성을 제품의 필수적인 객관적 품질 요건으로 민법에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BGB 제434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여 내구성, 기능성, 호환성, 안전성과 함께 수리 가능성을 제품의 통상적 품질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수리할 수 없는 제품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소비자는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수리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BGB 제437조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BGB 제479조a부터 479조g의 신설을 통해 보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가 제조사에게 직접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 수리청구권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 판매자 중심의 하자 담보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조사는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만 수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예비 부품 공급 의무와 관련하여, 에코디자인 규정의 품목별 위임 규정이 정한 수리 가능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제품은 하자 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스마트폰 배터리·카메라 모듈은 모델 생산 중단 후 최소 7년, 세탁기 모터·펌프는 최소 10년간 예비 부품 보유 및 수리 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규제 중심의 접근에 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추는 재정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2020년 빈(Wien)시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된 「수리 보너스 제도(Reparaturbonus)」를 2026년 1월 12일을 기점으로 「기기 구출자 프리미엄 제도(Geräte-Retter-Prämie)」로 변경하여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sup>11)</sup>

해당 제도는 소비자가 고장 난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수리할 때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직접 현금성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총수리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수리 1건당 최대 130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수리를 최종적으로 포기하더라도, 고장 원인 파악과 견적 산출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30유로를 지원한다. 제도 변경 이전에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지자 체별 자체 지원으로 이관한 상태다.

수리 보너스 제도 자체가 매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 만큼 기기 구출자 프리미엄 제도에 대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기대가 크다. 지난 3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80개의 파트너 수리 업체가 해당 제도에 등록되어 활동중이다. 또한 2026년 1월 12일 출시 이후 3월 26일까지 총 65,300장의 바우처가 발행되어 이 중 59,000장이 사용되었고 2,100건의 지급을 완료했

11)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Klima- und Umweltschutz, Regionen und Wasserwirtschaft. (2025). Geräte-Retter-Prämie - Informationsblatt zur Förderung von Reparaturen für Privatpersonen.

다. 수리 수요가 높은 분야는 커피 머신, 세탁기, 식기세척기, 노트북, 오븐 순이었다.<sup>12)</sup>

### ③ 프랑스

프랑스는 수리권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수리권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수리권 지침에 따른 국내법 전환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내법 전환은 국가소비자위원회(CNC) 산하 지속가능소비 실무그룹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법안의 채택은 빠르면 2026년 가을로 예상된다. 논의는 주로 수리권 지침이 회원국에 위임한 부품의 합리적 가격 평가 기준과 프랑스의 기존 제도인 「수리 가능성 지수(Indice de réparabilité)」, 「확대생산자책임(REP, Responsabilité Élargie du Producteur)」 수리 기금, 그리고 「소비자기본법(Code de la consommation)」의 계획적 진부화 규제와의 조율에 집중되어 있다.<sup>1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리권 제도를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2021년 1월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AGEC, Loi anti-gaspillage pour l'économie circulaire)」을 근거로 세계 최초의 법정 수리가능성 지수를 도입하였다. 이 지수는 전자·가전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0에서 10점으로 평가하여 판매 시점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평가 기준은 문서화(기술 문서 접근성), 분해 및 접근 용이성, 예비부품 가용성, 예비부품 가격, 카테고리별 특정 기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적용 대상은 스마트폰, 노트북, 전면 드럼 세탁기, TV, 전동 잔디 깎기였으며, 이후 품목이 순차 확대되었다.

2025년부터는 수리가능성 지수보다 범위가 넓은 「지속가능성 지수(Indice de durabilité)」가 도입되어, TV(2025년 1월 8일부)와 세탁기(2025년 4월 8일부)에 대해 수리가능성 지수를 대체하였다. 지속가능성 지수는 수리 용이성 외에 제품의 전반적인 내구성과 신뢰성까지 평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EU 차원의 수리가능성 지수 표준화 논의와도 연동되어 있다.

## (3) 미국의 동향

미국의 수리권 논의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주(State) 단위 입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21년 5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의회에

12)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Klima- und Umweltschutz, Regionen und Wasserwirtschaft. (2026. 3. 26.). Geräte-Retter-Prämie zeigt Wirkung: Hohe Einlösequote bestätigt Erfolg.

13) Huglo Lepage Avocats. (2026. 7. 14.). Économie circulaire : trois textes majeurs, un calendrier sous tension.

제출한 보고서 「Nixing the Fix」에서 제조사의 수리 제한 관행을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036」이 FTC에 수리 제한 규제 강화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연방 차원의 논의에 기폭제가 되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은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공식 폐지되었으며<sup>14)</sup>, 이후 2026년 6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자가 수리 행위를 명확히 하는 좁은 범위의 대통령 각서 「수리의 자유 촉진을 통한 생활비 인하(Lowering the Cost of Living by Promoting the Freedom to Fix)」가 별도로 발표되어 자동차 부문에 한정된 수리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현재 전자기기 수리권 법안이 미국 50개 주 전체에 발의된 가운데, 전자기기 분야 수리권 법을 실제로 제정한 주는 뉴욕,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등이며 코네티컷과 텍사스도 2026년 중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sup>15)</sup> 2026년 1월 기준 수리권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5.75%에 달하며, 2026년 하반기 추가 시행분을 포함하면 3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sup>16)</sup> 특히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가 입법 선도 사례로 꼽힌다.

## 1) 뉴욕주 입법 사례

뉴욕주의 「디지털 공정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은 2022년 12월 주지사 서명을 거쳐 2023년 12월 28일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뉴욕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된 해당 디지털 전자기기다.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제정된 미국 내 최초의 수리권 법제화 사례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뉴욕주의 결정은 이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다른 주들로의 수리권 입법의 도미노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p>17)</sup>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사의 정보 및 부품 제공 의무 ▲보안 잠금장치 해제 지원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다. 먼저 제조사의 정보 및 부품 제공 의무는 원제조업체(OEM)는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가 디지털 전자기기를 진단·유지·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 매뉴얼, 진단 도구, 순정 부품(새 부품 또는 중고 부품)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보안 잠금장치 해제 지원은 기기의 보안 기능이나 전자 잠금장치를 재설정하거나 접근하는데 필요한 특수 도구와 문서 역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은 뉴욕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디지털 전자 부품이 내장되거나 부착된 1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14) The White House. (2025. 8. 1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on Competition.

15) U.S. PIRG. (2025). The State of Right to Repair.

16) U.S. PIRG. (2025. 7. 1.). More than one-quarter of Americans covered by Right to Repair come Jan.

17) Davis Wright Tremaine LLP. (2023. 6. 20.). Electronics Right to Repair: New York and Minnesota.

전자기기이다. 적용 예외 품목도 있다. 자동차,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제품, 의료기기, 농기계, 공공안전 통신장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적용 시기는 적용 대상 기준일인 2023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제조되어 판매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사용해온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의 의의는 명확하다. 그동안 제조사가 독점해 온 수리시장의 장벽을 허물어, 소비자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더 저렴하고 빠른 독립 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자가 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소한 고장으로 버려지는 전자기기에 대한 소모적 구조를 탈피하고, 제품의 물리적 수명을 늘려 전자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도모했다.<sup>18)</sup>

## 2)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수리권법(Right to Repair Act SB 244)」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내 수리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제조사의 부품·도구 제공 의무화 ▲적용 품목 및 가격 기준 ▲의무 제공 기간 등이다.<sup>19)</sup>

제조사의 부품·도구 제공 의무화는 원제조업체(OEM)가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 그리고 서비스 대행사에 기기를 진단·유지·수리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 진단 도구(소프트웨어 포함), 순정 부품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적용 품목은 뉴욕주와 다르게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가 법안 발의 후 새롭게 제조된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둔 것과 달리 2021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조·판매된 전자제품 중 도매가 기준 50달러 이상의 제품에 적용했다. 의무 제공 기간도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50달러에서 99.99달러까지는 제품 생산 중단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 및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100달러 이상의 제품의 경우 제품 생산 중단 후 최소 7년 동안 부품 및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의 수리권을 개선하여 미국 내 수리권 입법의 표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애플 등 거대 빅테크의 수리 접근성 확대 반대라는 정책 선회를 견인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품과 진단 도구 개방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sup>20)</sup>

---

18)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024. 7. 1.). Attorney General James Reminds Consumers It's Easier Than Ever to Get Electronics Repaired.

19) West Contra Cost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uthority(RecycleMore). (2023. 10. 19.). The Right to Repair Law (SB 244) in California Helps the Circular Economy.

20) Maddie Stone. (2023. 8. 24.). In a historic about-face, Apple publicly supports right-to-repair bill, Grist.

### 3)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주의 「소비자 디지털 전자기기 수리권법(Consumer Right to Repair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H.B. 1121)」은 2024년 5월 28일에 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제조사의 자원 제공 의무 ▲부품 페어링 제한 ▲적용 대상 및 기준이다.<sup>21)</sup>

먼저 제조사의 자원 제공 의무는 원제조업체(OEM)가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에게 디지털 전자기기를 진단·유지·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 도구, 매뉴얼 및 문서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도구의 경우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수리를 방해하는 부품 페어링 제한은 제조사가 고유 식별 번호가 일치하는 특정 부품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사설 수리나 대체 부품 사용을 막는 부품 페어링 관행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사설 부품 사용 시 기기 성능이 저하되거나 허위 경고 문구가 뜨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했다. 이 내용은 해당 법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게임 콘솔, 텔레비전 등 다양한 디지털 전자기기를 포함하며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제조 및 판매(사용)된 기기부터 소급 적용된다. 적용에서 제외된 대상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전동 휠체어 제외), 비디오 게임 콘솔의 일부 특수 기능 등이다.

콜로라도주 H.B. 1121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부품 페어링 규제의 선구적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전 세계 수리권 운동에서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독점 통제 장치를 깰 수 있는 강력한 선례가 되었다.<sup>22)</sup>

### (4) 한국의 동향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가전·IT 제조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수리 선택권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식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충실함과 독립 수리 생태계의 빈곤이 공존하는 이 구조는 정보와 부품의 독점이라는 현실과 입법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다.

---

21) Colorado General Assembly. (2024. 5. 28.). Consumer Right to Repair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HB24-1121).

22) Resource Recycling, Inc. (2026. 1. 19.). Colorado expands repair rights as electronics rules take effect.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가전·IT 제조사들은 전국적인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 망을 구축하고 있어 소비자의 공식 서비스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 접근성은 공식 서비스센터에만 국한되며, 제조사들은 보안·안전·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자사 제품의 회로도, 진단 소프트웨어, 핵심 부품을 독립 수리업체나 소비자에게 비공개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단종되거나 일괄 교체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될 경우, 소비자는 대안적 수리 경로를 찾기 어렵고 사실상 조기 폐기와 신제품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 1) 제품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소비자

녹색연합이 2023년에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보면, 응답자의 77%가 수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나 때때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녹색연합은 부품의 빠른 단종, 수리를 맡길 곳에 대한 정보 부족, 수리 전문가 부족 등을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sup>23)</sup>

서울환경연합이 같은 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소비자의 수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로 ▲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리비용(48.4%) ▲보증기간 이후 수리 서비스 이용 불가(27.2%) ▲사설 업체 이용 후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제한(14.2%)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 서비스센터에 대한 수리마저 장벽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는 ▲자가수리 인프라 지원(35.7%) ▲기업의 수리 서비스 독점에 대한 제도적 제한(33.9%) ▲독립 수리업체 확산 지원(29.2%) 등을 꼽았다. 기업의 수리시장 독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sup>24)</sup>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2025년에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리시 발생하는 문제로 수리 비용 비쌈(5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리 방법 어려움(52.5%), 수리부품 없음(5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구매를 기피할 것(67.8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리가 용이한 제품은 가격이 높아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64.3점)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sup>25)</sup>

이를 종합하면, 한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리 장벽은 높은 수리 비용만이 아니라 수리 접근성 부족과 수리 불가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제조업체의 독점적 수리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독립 수리업체나 자가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23) 녹색연합. (2023).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24) 서울환경연합. (2023). 수리할 권리 고쳐 쓸 권리에 대한 현황 및 방향.

25) 한국환경연구원. (2025).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

## 2) 한국 내 수리권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한국의 수리권 법제화는 순환경제사회법의 정비와 국회 차원의 개별 법안 발의가 병행되며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입법 성과는 제조사의 노력 의무를 선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과 구체적 이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EU 및 미국의 규범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수리권 관련 조항

한국 정부는 기존의 폐기물 중심 규제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22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주요 기본법 성격의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리권 보장과 직접 관련된 핵심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생산·소비·유통 등 자원 흐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수리권과 관련한 대표 조항은 다음 세 가지다.

법 제3조 제2호(기본원칙)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수리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순환경제의 핵심 원칙으로 명시한다. 제17조(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의 조기 폐기를 방지하고 수리를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비부품을 사전 확보하고 배송 기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 중 제20조는 한국의 수리권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적 권고 성격을 고려하여 범위와 대상이 넓게 설정되어 있고, 포괄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조항은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제공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결국 수리권 적용에 제약과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이 제기되나, 권고적 성격의 법조항과 규제와 벌칙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 ② 국내 수리권 입법 현황

국회 차원에서는 수리권을 강행 규정으로 정립하려는 논의가 21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으나, 발의된 법안들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두 건의 관련 법안과, 네 건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두 건의 발의된 법안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2021, 강은미)과 「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2, 조정훈)이다. 먼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 수리권 정책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수리권 기본계획 수립, 제조사의 수리 용이성 설계 의무 및 수리 설명서 다양한 형태(영상 포함)

배포 의무 등을 담았다.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리기술자와 수리산업을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수리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인력 양성·기술개발·창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sup>26)</sup>

22대 국회에서는 수리권 관련 새 법안의 발의나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법률의 입법 또는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전된 내용은 없다. 다만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은 확인된다.

현재 총 여섯 건의 조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의 조례가 유일하다.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는 국내 자치법규 중 가장 먼저 수리권을 다루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표준 모델 역할을 하는 조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외에 서울시 노원구와 구로구, 마포구, 경기도 구리시, 인천시 남동구가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sup>27)</sup>

조례들은 기본적으로 수리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리 활성화와 문화 확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상 공구대여 및 사용법 교육, 수리전문가 및 업체를 연계한 사업 추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용, 교육과 체험, 정보체계 구축과 홍보,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조례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는지인데, 경기도, 구로구, 마포구 등은 수리지원센터 또는 수리활동지원단을 별도의 조문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

2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일: 2026. 8. 18.).

27)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검색일: 2026. 8. 18.).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

PART

# 4

## 국내외 민간·시민사회 수리권 실천 동향

---

- (1) 국외 사례
- (2) 국내 사례

### (1) 국외 사례

수리권 실천 운동은 단일한 기원을 갖지 않으며, 유럽과 미국을 선두로 각기 다른 경로로 시작되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리페어 카페(Repair Café)’를 시작으로, 영국에서는 2012년 런던에서 자넷 건터(Janet Gunter)와 우고 발라우리(Ugo Vallauri)가 소규모 수리 모임으로 ‘리스타트 프로젝트(The Restart Project)’를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13년 정식 사회적기업 겸 자선단체로 확대된다. 이 단체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 Restarters.net을 통해 수리 자원봉사자와 활동가를 관리하며, 2025년 기준 영국 전역 약 800개에 달하는 수리 거점이 등록되어 있다.<sup>28)</sup>

미국의 경우, 2009년 피터 무이(Peter Mui)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인근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공공 공유 모임으로 ‘픽스잇 클리닉(Fixit Clinic)’을 시작하였다. 2025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1,300건 이상의 수리 행사를 조직하며 캘리포니아를 넘어 콜로라도·미네소타·매사추세츠 등으로 확산했다. 픽스잇 클리닉은 기기 소유자 본인이 수리의 주된 행위자가 되고 자원봉사자는 안내자(코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참가자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9)</sup>

픽스잇 클리닉 이외에 미국의 수리 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진행하는 단체로는 ‘아이픽스잇(iFixit)’이 있다. 2003년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Cal Poly) 기숙사에서 카일 위엔스(Kyle Wiens)와 루크 소울스(Luke Soules)가 고장난 애플 iBook G3를 고치려다 아무런 수리 설명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두 사람은 직접 분해해 고친 뒤 그 과정을 온라인에 무료 매뉴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아이픽스잇은 리페어 카페나 픽스잇 클리닉처럼 자원봉사 기반의 오프라인 행사 조직이 아니라, 수리 정보·부품·도구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면서 그 수익으로 무료 매뉴얼 생태계와 입법 로비 활동을 뒷받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8) The Restart Project. (2025). Impact Report 2025.

29) Azul Dahlstrom-Eckman. (2026. 2. 20.). Bay Area's 'Fix-It' Culture Thrives Amid State's Forthcoming Right-to-Repair Law. KQED

## 1)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유럽 수리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리페어 카페(Repair Café)’가 주요하게 거론된다. 리페어 카페의 창립자 마르틴 포스트마(Martine Postma)는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지속가능성과 폐기물 감소 및 예방 방법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써왔다. 2009년 수리의 창조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다룬 미술 전시회를 취재하며 물건을 수리하는 행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널리즘을 넘어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기로 확신하며 수리권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10월 18일, 포스트마는 지역 자원봉사 기술자들이 주민들이 가져온 고장 난 물건을 무료로 고쳐주는 첫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가 큰 호응을 얻자 포스트마는 카페 운영 매뉴얼과 스타터 키트를 제작하고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초창기에는 주로 환경운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리페어 카페를 조직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웃과의 커뮤니티적 가치에 이끌린 사람들로 참여층이 점차 넓어졌다.<sup>30)</sup>

이후 리페어 카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50개국 이상에서 3,500개 이상의 거점이 운영되고 있다.<sup>31)</sup> 2026년 7월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에서 공개한 글로벌 서베이에 따르면, 연간 약 60,000건의 행사가 열리고 89,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160만 개 이상의 품목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페어 카페는 다음과 같은 운영 방식을 표방한다. 첫째, 자가 수리 우선 원칙이다. 방문자는 가능한 한 스스로 수리를 시도하도록 하며, 현장의 수리 전문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전문가가 물건을 전적으로 대신 고쳐주는 대행 수리 서비스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방문자가 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가 수리 기술을 익히고 수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무료 서비스와 기부 경제 원칙이다. 수리 공임과 도구 대여는 무료로 제공하며, 특수 부품 비용만 실비로 청구한다. 운영 재원을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는 구조를 갖추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이처럼 자가 수리 우선 원칙과 무료 기부 경제라는 두 원칙은, 리페어 카페를 일반적인 수리 서비스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만든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

---

30) Sally McGrane, (2012, 5. 8.). An Effort to Bury a Throwaway Culture One Repair at a Time. The New York Times.

31)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2025). 5th International Repair Café Conference.

32)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2026, 7. 3.). Repair Cafés attract 1.5 million visitors every year.

는 대신, 방문자 스스로가 수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배우고 그 과정 전체가 기부와 자원봉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3)</sup>

리페어 카페 운영 사례 중 2026년 8월 기준 누적 수리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 카펠러 안 던 에이셀(Capelle aan den IJssel) 리페어 카페다.<sup>34)</sup> 2014년 3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 25명의 자원봉사자가 커피머신, 진공청소기, 자전거, 재봉틀, 컴퓨터, 시계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수리를 지원한다. 방문자는 물건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리 과정에 함께 참여해 제품의 구조와 유지·보수 방법을 배우며, 수리비는 받지 않고 필요한 부품 비용과 자발적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sup>35)</sup>

또 다른 사례로 ‘리페어 카페 부다페스트(Repair Café Budapest)’가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8구의 리페어 카페는 2023년 12월 참여예산제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임대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운영되며, 재봉·목공·전자기기·자전거 정비 등 요일별로 특화된 수리 세션을 제공한다.

이 거점이 특별한 이유는 수리라는 행위가 노숙인과 지적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이다. 지적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활을 위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정서적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자원 공유 네트워크와 더불어, 고립되기 쉬운 노년층이나 취약 계층이 수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성취감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다. 리페어 카페가 공동체의 돌봄과 사회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sup>36)</sup>

리페어 카페를 자신들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페어 카페 패서디나(Repair Café Pasadena)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타운의 환경 단체인 ‘트랜지션 패서디나(Transition Pasadena)’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로 2012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리페어 카페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트랜지션 타운의 환경 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페어 카페는 단순히 수리권과 자원순환에 국한되지 않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거대 자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량 생산과

---

33)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House Rules. (접속일:2026. 8. 20.).

34)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RepairMonitor. (접속일:2026. 8. 20.).

35) Duurzaam Capelle. (2024. 3. 18.). De Capellenaar krijgt het voor elkaar: “Wij geven spullen een langer leven”.

36) Cooperative City Magazine. (2025. 6. 11.). Budapest’s First Repair Café: Where Sustainability Meets Community-Building.

소비 시스템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표방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후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상호부조를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캘리포니아는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지역인데, 실제 재난 발생 시 리페어 카페의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의 잃어버린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고쳐주는 등 생존과 직결된 도움을 제공한다. 지역사회가 물리적인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sup>37)</sup>

2023년 4월에는 리페어 카페 패서디나가 주민들이 고장 난 전자기기와 가전·장난감·장신구·자전거 등을 무료로 수리받는 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 수리권법(SB 244)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패서디나 리페어 카페 운영자, 지역 제로웨이스트 상점 대표들, 패서디나 부시장, 글렌데일시 시의원과 수리권 관련 활동가들이 함께 발언하였고, 지역 고등학생 수리 애호가까지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리페어 카페가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풀뿌리 정치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 것이다.<sup>38)</sup>



그림 4. 암스테르담 소재 리페어 카페에서 수리 중인 자원봉사자 사진: Martin Waalboer 촬영, 리페어 카페 국제 재단 제공(2022).

37) Iris Kim. (2025. 3. 10.). Why Consumers Are Fighting for the Right to Repair Their Own Tech. NBCU ACADEMY.

38) CALPLRG. (2023. 4. 5.). Community leaders, local groups, and businesses rally for the Right to Repair during free Repair Café.

앞선 사례들은 리페어 카페가 단순히 수리권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아가 돌봄과 사회경제 연대로 확산하는 경로로서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리권이라는 그릇 안에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를 담아내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수리권 운동의 확산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례다.

## 2) 아이픽스잇(iFixit)

앞서 언급한 아이픽스잇은 73만 9천 건<sup>39)</sup> 이상의 무료 수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의 수리 가이드 및 기기 정보를 위키피디아 형태의 계층적 카테고리 형태로 조직함으로써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수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아이픽스잇이 이 데이터를 오픈 API로 무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수리 API”라 자칭하며, 제3자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 데이터들은 독일 보훔 대학 연구진이 구축한 학술 데이터셋(MyFixit-Dataset)의 기반이 되었다. 연구진은 15개 기기 카테고리에 걸친 3만 1,601건의 수리 매뉴얼을 ‘필요 도구, 분해 부품, 제거 동작’ 단위로 쪼개어 규칙적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람이 읽던 수리 지식을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아이픽스잇이 수리 데이터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한다.<sup>40)</sup>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의 규모는 카테고리별로 PC 약 8만 5천 건, 공구 약 7만 건, 의료기기 약 5만 5천 건, 가전제품 약 4만 9천 건, 전화기 약 3만 2천 건 등이다. 이외에도 맥(Mac), 가정용품, 게임 콘솔, 기술, 의류, 자동차 및 트럭, 전자제품, 차량, 카메라, 컴퓨터 하드웨어, 태블릿 등의 방대한 수리 가이드를 제공한다.<sup>41)</sup>

이는 스마트폰·노트북 같은 전형적 소비자 가전을 넘어, 의료기기·차량·의류·공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품을 분해해 0~10점으로 채점하는 수리용이성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무선 이어버드, E-리더, 스마트워치가 대상이다.<sup>42)</sup>

또 하나 아이픽스잇의 특징은 수리 거점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실제 아이픽스잇은 2015년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내 리페어 카페들에 부품·도구·할인을 제공

39) 한국시간 2026년 8월 20일 오후 5시 기준, 무료 수리 가이드는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기준시간을 표기함.

40) Nima Nabizadeh, Dorothea Kolossa, Martin Heckmann. (2020). MyFixit: An Annotated Dataset, Annotation Tool, and Baseline Methods for Information Extraction from Repair Manuals. Proceedings of the 12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2120-2128.

41) iFixit. Guide. (접속일:2026. 8. 20.).

42) iFixit. Repairability. (접속일:2026. 8. 20.).

해 왔다. 또한 2019년에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리페어 카페에 수리 도구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협력이 강화되어 아이픽스잇의 단계별 수리 가이드가 리페어 카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리페어 카페 국제재단은 행사장에 태블릿을 비치해 아이픽스잇 웹사이트를 띄워두라는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sup>43)</sup>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아이픽스잇 유럽 본부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인근 지역 리페어 카페에 정기적으로 부품과 도구를 지원하고, 동시에 소형 전자기기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수리작업을 직접 돕는다. 이는 리페어 카페가 소형 전자기기 수리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수리 난이도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자가 수리가 쉽지 않다는 구조적 공백을 아이픽스잇의 전문성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sup>44)</sup>

이에 더해 아이픽스잇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미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6년 7월에는 ‘커뮤니티 리페어 허브’라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이는 수리 거점들이 무료로 자신들을 등록하고 행사 일정을 공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수리 거점을 아이픽스잇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sup>45)</sup>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수리권 공동체나 독립 수리업체, 자가 수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보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수리권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수리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과 전문 수리 도구 등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픽스잇의 수익은 결국 수리권의 확장에 연동되어 있다.<sup>46)</sup>

## (2) 국내 사례

국제사회의 수리 서비스 장벽이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수리권 운동이 전개됐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수리 서비스 인프라와 독점적 정보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리 생태계 조성 노력은 수리권 관련 법률의 강화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

43) iFixit. (2022. 10. 10.). Stronger Together: iFixit and Repair Cafe Join Forces.

44) iFixit. (2015. 10. 9.). Repair Cafés: Fix—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s.

45) iFixit. (2026. 7. 16.). The Community Repair Hub Is Live: Find a Repair Event Near You!.

46) iFixit. Store. (접속일:2026. 8. 20.).

## 1) 민간·시민사회 주도 수리권 실천 사례

국내 시민사회 주도의 수리권 운동은 환경 단체, 제로웨이스트 매장, 시민들이 연대하여 소비자 인식 전환과 정보 독점 공론화를 이끌어 왔다. 이들의 실험과 실천은 국내 수리권 확산의 중요한 경로이며,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 ① 알맹상점

“깍뎀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국내 대표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리필 스테이션 운영과 더불어 일상 속 자원순환 및 수리 문화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일상 소모품 리필, 플라스틱 회수센터 운영, 유관 단체 연계형 소규모 리페어 이벤트 및 자가 수리 기술 공유회 지원 중이다.<sup>47)</sup>

알맹상점의 ‘수리수리다수리’ 워크숍은 제조사의 기술 통제가 강한 스마트폰 영역에서 소비자가 자가 수리 키트를 활용해 구형 기기의 배터리나 액정을 직접 교체해보는 실천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알맹상점의 하드웨어 수리 영역은 ‘수리상점 곰손’으로 이관되고 현재 알맹상점은 소프트 리페어와 자원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 물리적 수리 공간 운영은 이전했지만, 기업의 수리 독점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 및 정당·환경단체와의 입법 캠페인은 알맹상점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sup>48)</sup>

### ② 수리상점 곰손

알맹상점의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6명이 사비를 모아 2024년 2월 서울 망원동에 개설한 시민 주도형 수리 공간이다. ‘곰손’이라는 명칭은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수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으로, 기술 숙련자와 비숙련자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운영 철학을 반영했다.

소비자가 고장 난 생활용품을 직접 가져오면 기술을 갖춘 운영자가 대신 고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앉아 분해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자가 수리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액의 이용료로 공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봉틀 수선, 아이폰 배터리 교체, 우산 수리 등 다양한 주제의 정기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sup>49)</sup>

47) 알맹상점. 소개. (접속일:2026. 8. 20.).

48) 이유진. (2024. 8. 20.). ‘일회용 사회’에 저항하는 수리 공동체 곰손. 한겨레21.

49) 신선영. (2024. 6. 3.). 수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리상점 곰손’ [포토IN]. 시사IN.



그림 5.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 수리할 권리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 서울환경연합(2026).

특히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잠금으로 수리가 제한되는 스마트폰 영역의 자가 수리 워크숍은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으며, 소비자가 정보 독점 구조를 직접 체감하고 공론화하는 리빙랩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재는 주4일(목~일) 상시 오픈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며, 2026년 봄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리권의 법제화와 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sup>50)</sup>

### ③ 서울환경연합 ‘수리하는 자들’ 아카이브

서울환경연합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동네 전파사, 구두 수선방, 옷 수선집, 가전 사설 수리점의 위치를 추적하여 오픈소스 형태의 수리 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수리·수선 행사 정보, 업체 정보, 수리 방법 등을 공유하며, 소셜액션 플랫폼 베이크(vake.io)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열람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직접 수리 경험과 노하우를 기록하는 ‘나의 수리 일기’ 코너는 시민 간 수평적 지식 공유의 사례다.<sup>51)</sup>

50) 서울환경연합. (2026. 4. 28.). 수리할 권리, 선언 넘어 실행으로…법 개정·인프라 구축 과제 한자리에.

51) 서울환경연합. (2024. 5. 29.). 이렇게 고치면 기본이 좋거든요.

#### ④ 인천 남동희망공간 ‘리페어파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희망공간에서 열리는 리페어 컬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바자회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원 재활용과 수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나누는 자리다. 리페어 존에서 고장난 우산과 자전거를 수리해주며, 의류 리폼과 생활가전 수리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sup>52)</sup>

## 2) 지방자치단체 주도 수리권 실천 사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센터와 자원순환센터 등의 공공 유허 공간과 행정 예산을 활용하여 수리 거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조례제정과 별개로 이뤄져 온 수리권 실천으로 수리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 ① 리페어 카페 성동

서울 성동구의 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단독 공유센터(전국 최대 규모, 공구·생활용품·캠핑용품 등 1,000여 개 물품 보유)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자가 수리 워크숍 ‘리페어 카페 성동’을 정기 운영하고 있다.

수리 기술을 가진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유)반장’이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가 수리 방법을 안내하며,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재료는 공유센터 비치 물품을 활용한다. 2024년 12월에는 전자제품, 목재, 의류, 자전거 등을 아우르는 ‘수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내 수리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2026년 7월 기준 총 30회의 자가 수리 워크숍이 운영되었으며, 매월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sup>53)</sup>

### ② 공공 장난감 수리센터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전국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 지원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장난감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장난감 수리센터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곳이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인천시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다.

60~70대 은퇴한 시니어들을 재교육하여 장난감 수리를 맡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곳의 수리센터를 운영중이다. 남동구 장난감 무료 수리센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수리를 접수하며, 수리 가능 여부를 댓글로 안내한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수리센터

52) 남동희망공간. (2025. 9. 27.). [남동희망공간] 수리수선 교육과 리페어파티.

53) 윤종철. (2025. 4. 28.).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빌려써요”... 성동공유센터, ‘물품 대여’ 각광. 성동저널.



그림 6.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 사진·남동구청(2021), 보도자료 ‘두 돌 맞은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 코로나19에도 변함없는 열정’

무인 수거함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넣어두면 된다. 현재도 월 수십 건의 수리 의뢰가 들어오고 수리 가능한 장난감들이 원래 기능을 되찾고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 남동구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직영 모델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니어 재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장난감 수리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여까지 확장하는 등 공공 운영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직영 장난감 수리센터는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모델로 삼아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sup>54)</sup>

이러한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장난감 수리가 소형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수리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난감 수리 영역에서 제대로 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가전 수리도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4) 김상연. (2021. 1. 18.). ‘수리율 97%’…울던 아이 웃게 하는 장난감 박사들의 마법. 연합뉴스.

### ③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누구나수선소’

경남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2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복지관 1층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의류 수선을 위한 재봉틀과 소형 가전·생활용품 수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 및 부자재를 비치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리 관련 교육과 홍보는 물론 수리권 관련 단체와의 연대, 지역 수리권 관련 인식조사, 지역 내 수리 가능한 공간을 소개하는 고쳐볼지도,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폭넓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3월 국제 리페어 카페 재단(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의 리페어 카페 지도에 공식 등록됐다. 2026년 기준 국내에는 총 5개소가 이 국제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데,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비수도권은 누구나수선소가 유일하다. 누구나수선소의 사례는 적절한 공간과 운영 주체, 예산이 있다면 수도권 이외의 중소 도시에서도 충분히 수리권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sup>55)</sup>

---

55) 안지율. (2026. 3. 18.). 밀양 ‘누구나수선소’ 세계 리페어카페재단 지도에 올랐다. 뉴시스.

PART

5

# 제주도 수리권 정책 및 실천 동향

---

- (1) 제주도민 수리권 인식 조사 결과
- (2) 제주도 수리권 실천 동향
- (3) 민선9기 제주도의 수리권 정책방향

## 5

## 제주도 수리권 정책 및 실천 동향

제주도에서 수리권과 관련한 정책과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수리권의 실천은 주로 제주시새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수리수리다수리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은 미비한 상태였으나 최근 민선9기 제주도정 공약 사항에 수리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제주도민 수리권 인식 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수리권 인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행된 조사는 없다. 다만 제주시새활용센터가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가 일부 존재하여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sup>56)</sup>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제품 고장 발생 시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가 ‘수리’를 꼽았고, ‘새 제품 교체(16%)’, ‘방치(11%)’가 뒤를 이었다. 기본적으로 고장 난 제품을 접했을 때 수리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의미다.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1%에 달했다. 주로 수리한 제품은 대형 가전(28%), 스마트폰·태블릿(26%), 컴퓨터·노트북(21%), 소형 가전(20%) 순이었다. 수리 방법으로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이 66%로 가장 많았고, ‘사설 수리점 이용(18%)’, ‘자가 수리(15%)’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육지(제주 외 지역)로 보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46%나 되었다. 육지로 보낸 주된 이유로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도외에 위치해서(56%)’가 가장 높았고, ‘제주도 내 수리가 가능한 독립 수리업체가 없어서(3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리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높은 수리 비용(31%)’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긴 수리 시간 및 대기 시간(26%)’, ‘수리점까지의 거리와 접근성 불편(19%)’, ‘필요한 부품 부재(10%)’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를 포기하는 이유 역시 이와 유사했다. ‘새로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까운 수리점이 없음(23%)’, ‘수리 기술이나 도구가 없음(23%)’ 등이 꼽혔다.

56)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제주도민의 제품 수리 경험과 수리권 인식 조사.

스마트폰 교체 사유에 대한 응답도 주목할 만하다. 약정기간이 끝나거나 새 모델이 나와서 교체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던 반면, 가장 결정적인 교체 이유는 ‘고장(68%)’이었다. 스마트폰 수리 경험은 72%가 ‘있다’고 답했으며, 수리 경로로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81%)’가 ‘독립 수리업체(16%)’를 압도했다.

한편, 제품의 수리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매우 큰 영향이 있다’, 30%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도민의 93%가 수리 가능성이 보장된 제품의 구매를 명확히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제품 수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입증한다. 수리 경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교체 사유가 대부분 고장에 기인한다는 점은 수리 환경만 잘 갖춰진다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수리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해 구매하겠다는 응답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이 수리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수리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 비용 문제를 꼽는 것은 대기업 위주의 독점적 수리 서비스 생태계에 기인한다. 또한 제주도에 자체 서비스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독립 수리업체나 자가 수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부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수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결국 제주도 내에 독립 수리 생태계와 자가 수리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활제품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리 수요가 전자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내 전자폐기물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주도 수리권 실천 동향

제주도 내 수리권을 실천하는 환경 단체,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수리권 실천이 본격화된 것은 2024년 6월 제주시새활용센터가 개관하면서부터다. 제주시새활용센터는 2024년 6월에 개관한 자원순환 복합 거점으로, 공유형 창작소와 수리수선실,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실, 교육·체험실, 입주 기업 사무실(7개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125회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5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제주시새활용센터가 운영하는 수리권 프로그램인 ‘수리수리다수리마을’은 시민이 직접 수리 문화를 체험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사업이다. 제품이 고장 났을 때 폐기하거나 수리 서비스센터를 찾는 방식에서, 스스로 수리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생활 기술 습득, 수리를 위한 점검·해체 실습 등

단계별 프로그램과 안내를 병행해 참여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회 새로운 기관을 초대해 협업하며 도내 수리권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sup>57)</sup>



그림 7. 수리수리다수리마을 휴대전화 배터리 교체 교육 사진:제주시새활용센터(2026).

수리 교육 프로그램은 폰 해체 및 배터리 교체, 옷 수선, 목공, 장난감 수리, 우산 수리 등을 진행했다. 2025년 9월에는 수리상점 곰손과 협력해 ‘제주에서 고쳐 쓰다: 새활용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내 주요 수리권 활동 단체와 협력과 네트워크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제주시새활용센터가 단순한 체험 교육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리권 실천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8)</sup>

실제 제주시새활용센터에서 격월로 정기 개최되는 ‘수리수리다수리마을’ 참여자들도 프로그램에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다. 2026년 7월 11일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7)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제주시새활용센터 2024 활동보고서.

58) 제주시새활용센터. (2026).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활동보고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세은 씨(제주시 오라동)는 “제주시새활용센터에서 이러한 자원순환 및 수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와서 동참해 본 것은 처음이다”라며 “일상에서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수리 관련 프로그램과 자원순환 행사가 지역 사회 내에서 더욱 활발하고 주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장난감 수리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어린이 참가자 이정현 군은 “평소에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다. 고장 난 장난감을 버리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오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의 수리권 전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수리권의 확산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수리수리다수리마을 장난감 수리 교육 사진:제주시새활용센터(2026).

### (3) 민선9기 제주도의 수리권 정책방향

2026년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위성곤 도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6월 30일에 100대 정책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100대 정책과제에는 자원순환 전주기 달성으로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74번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이 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수리권 보장 및 수리 문

화 확산을 위한 「(가칭)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 제정<sup>59)</sup>이 명시되어 있다.

제주도정의 정책과제로서 수리권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자원순환 정책은 주로 재활용과 재사용, 재활용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리권에 대한 관심이 정책으로 발현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 내 수리권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커져감을 의미한다. 앞선 인식조사 결과나 제주시 생활용센터의 ‘수리수리다수리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면 수리권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확대와 수리권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적 관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생활쓰레기 문제로 홍역을 치러온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201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신규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은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이었다.

특히 이런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2019년 제주도의 압축쓰레기 불법 반출 사태다. 도외 항만 창고에 불법으로 투기된 압축쓰레기와 필리핀으로 불법 반입된 압축쓰레기 문제는 당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얼마나 큰 부하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이 소각량을 넘어서고 이를 매립장으로 반입하면서 매립장 역시 조기 포화에 이르게 되자, 제주도는 특단의 대책으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 보관했다가 새로운 소각시설이 건설되면 태우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태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된 이유는 결국 인구와 관광객 증가 때문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저가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들이 잇따라 취항함에 따라 제주도와 타 지역 간 항공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인구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처리량을 넘어서는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해서 쌓아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압축 포장을 하더라도 마냥 쌓아놓을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 비로 인해 포장이 낡게 되면 고농도의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강한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환경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일정 물량을 넘어서는 경우 도외 반출을 감행해 왔다.

---

59)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2026).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100대 정책과제.



그림 9. 제주시 봉개매립장 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 사진:김정도(2021).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침,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쓰레기산 논란이 가열되던 때였기에 그 파급력은 더 컸다. 특히 필리핀으로 반출된 쓰레기는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해 쓰레기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처분되는 상황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운송과 처리에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sup>60)</sup>

이러한 사태를 겪으며 제주도에서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자원순환 정책이 크게 강화되었고, 생활쓰레기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재활용 도움센터, 다회용 컵 및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 등이 추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해 수리권으로까지 정책이 확장된다는 점은 자원순환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오래 쓰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이 민선 9기 제주도의 정책과제에도 깊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0)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

PART

# 6

## 제주형 수리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 (1) 수리 공간 등 인프라의 구축
- (2) 기술자 등 인력 운영 체계
- (3) 수리 정보 축적과 공유
- (4) 수리권 조례 제정

앞서 조사한 제도와 사례 등을 토대로 제주형 수리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이 있다. 크게 ▲수리 공간 등 인프라 구축 ▲기술자 등 인력 운영 체계 ▲수리 정보 축적과 공유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1) 수리 공간 등 인프라의 구축

앞서 살펴본 리페어 카페와 같은 수리 공동체나 공공이 운영하는 수리센터 등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거점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리할 도구와 장비를 대여하고 작업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리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수리권을 기반으로 한 공공 수리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며, 독립 수리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일부 독립 수리업체는 아이폰, 노트북, PC 등 특정 제품 수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수리권을 확산하고 강화하는 경로는 물리적인 수리 거점을 두는 것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시새활용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수리권 관련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기초로 하여 점진적으로 제주 전역에 걸쳐 수리 공간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서귀포시새활용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두 곳의 새활용센터를 수리권의 핵심 거점으로 두어 수리 장비와 도구 및 자가 수리 공간 공유, 수리 인력 양성 및 시민 대상 자가 수리 교육, 수리 정보 축적 및 대중적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의 보다 보편적인 수리권 확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다.

읍·면 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 수리 장비와 도구를 비치하고 자가 수리 공간을 제공하며, 소수의 수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도민의 보편적 수리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활용이 어렵다면 공공 체육관 시설의 유휴 공간 등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선 사례들에서 확인했듯, 수리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곳에 머물지 않고 취약계층의 돌봄과

교육,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수리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돌봄을 강화해 나가려면 거점 형태의 수리 공간은 매우 유용한 지역 자산이 된다.

다만 공공이 수리 생태계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당연히 수리 산업 생태계를 민간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독립 수리업체를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기술 습득과 초기 운영 안정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공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 기술자 등 인력 운영 체계

수리 거점이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수리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리페어 카페와 같은 수리 공동체에서는 주로 자원봉사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방식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상근 기술자가 수리 거점에 상주하며 교육과 직접 수리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수리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가 빈약한 한국 현실에서는 그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는 숙련되지 않은 개인이 자가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반 대중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민들에게 보편적인 수리권을 보장하려면 수리 인력을 상근으로 고용하여 거점별로 상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자원봉사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상근 인력이 중심을 잡는 형태가 보편적 수리권 보장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인력 확보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도의 정밀 장비가 아닌 이상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PC, 가전제품 등은 과거 관련 제품 조립이나 유지 보수를 직업으로 삼았던 기술자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수리 기술은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한 시니어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이외에도 제주도교육청,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와 협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전문 기술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 학교와 연계하여 수리 기술 인력 양성과 기존 기술자의 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장기적인 수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 인력 양성에도 이러한 교육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 (3) 수리 정보 축적과 공유

수리를 위한 공간, 기술 인력만큼 중요한 것이 수리 정보다. 제품에 대한 수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가이드가 명확하다면 수리 작업은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이러한 정보의 개방은 대중의 자가 수리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준다.

이미 국제적으로 축적된 수리 데이터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앞서 소개한 아이픽스잇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 세계 수리 단체나 독립 수리업체가 각기 다른 형식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오픈 리페어 얼라이언스(Open Repair Alliance)’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플랫폼에는 한국기업이 제조하거나 중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들의 수리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제품 분해 정보, 수리 용이성, 고장 증상별 해결책, 수리 성공 여부 및 실패 원인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기록하여 공유하는 자체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글로벌 플랫폼과 연동하는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제주만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 둘을 융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핵심은 새롭게 구축되는 로컬 수리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인데, 이 역시 공적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 행정시에 위치한 새활용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수리권 조례 제정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기업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의 제·개정이다. 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선도적으로 수리권 운동을 정책화하려는 제주도 입장에서 마냥 국회의 법률 제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선도적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리권 확산을 선제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선 9기 제주도 역시 정책 과제로 수리권 확산과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내실 있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면한 선결 과제다. 현재 수리권 관련 조례의 표본 모델로서 기능하는 경기도 조례 등을 벤치마킹하되, 앞서 제언한 인프라, 인력, 정보 체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주형 조례에 담아낸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조례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크게 ▲도지사의 책무로서 도민에게 보편적인 수리권 보장 명시 ▲수리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등 재정 지원 의무 ▲수리권 관련 지원 사업

의 구체적 설정 및 시행 근거 ▲수리권 보장을 위한 거점 수리 공간 설치·운영 및 위탁 관련 사항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독점적인 수리 서비스 정책을 고수하며 수리 정보를 비공개하는 제조 기업들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물론 조례는 상위법의 강제 조항이 없는 한 기업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기업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향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다음은 앞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권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보편적인 수리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수명 연장과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플라스틱 제로 및 완전한 순환 경제 사회’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권(수리할 권리)”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고쳐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 등으로부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정보 등을 제공받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제조기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도민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제주형 수리 거점 공간”이란 도민이 자가 수리를 하거나 수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및 권역별로 지정·구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보편적인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 지역에 비해 수리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물류비 등의 이유로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인프라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수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권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리권 보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읍·면·동별 수리 접근성 취약 지역 분석 및 개선 방안
3. 제주형 수리 거점 공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안
4. 수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체계 구축 방안
5. 제조기업과의 협력, 정보 공개 유도 및 도서 지역 추가 물류비 저감 방안
6. 자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리권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및 제주 특화 물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수리권 보장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서 지역의 특성상 제품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부품 반입 물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주 특화 수리권 관련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수리권 확산과 제주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 수리 기술 교육 및 지역 기반 전문 인력 양성
2. 도서·중산간 등 수리 취약 지역 대상 ‘찾아가는 이동식 수리 버스’ 운영
3. 도민 자가 수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매뉴얼 보급 및 공구 대여 사업
4. 수리 가능한 가전·장비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주형 자원순환 은행’ 연계 사업
5. 그밖에 도지사가 수리권 보장과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주형 수리 거점 공간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행정시 및 읍·면·동) 수리 거점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 거점 공간은 자가 수리 공간 제공, 수리 장비 대여, 수리 교육, 부품 공동 수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수리 거점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지역 주민 자치단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조기업의 정보 공개 유도 및 자발적 협력)** ① 도지사는 독점적인 수리 서비스 정책을 고수하며 수리 정보를 비공개하는 제조기업이 정보 및 부품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리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권 확산을 위해 제조기업-제주자치도 간 자발적 협약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수리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개한 우수 제조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수리권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리권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홍보·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리권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내용이 조례에 제대로 담긴다면, 제주의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수리권 보장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육지부에 비해 수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촘촘한 수리권 조례를 제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편적인 수리권을 향유하고, 제주도의 생활 쓰레기 저감을 넘어 완전한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김상연. (2021. 1. 18.). '수리율 97%'...울던 아이 웃게 하는 장난감 박사들의 마법. 연합뉴스.
- 김혜린. (2026. 4. 9.). AI의 시작은 채굴이다. 프레시안.
- 남동희망공간. (2025. 9. 27.). [남동희망공간] 수리수선 교육과 리페어파티.
- 녹색연합. (2023).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 박은경. (2025. 12. 27.). 검은 연기 속 '현대판 금광'...가나의 '버너 보이즈'. 경향신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일: 2026. 8. 18.).
- 서울환경연합. (2023). 수리할 권리 고쳐 쓸 권리에 대한 현황 및 방향.
- 서울환경연합. (2024. 5. 29.). 이렇게 고치면 기분이 좋거든요.
- 서울환경연합. (2026. 4. 28.). 수리할 권리, 선언 넘어 실행으로...법 개정·인프라 구축 과제 한자리에.
- 신선영. (2024. 6. 3.). 수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수리상점 곰손' [포토IN]. 시사IN.
- 안지율. (2026. 3. 18.). 밀양 '누구나수선소' 세계 리페어카페재단 지도에 올랐다. 뉴시스.
- 알맹상점. 소개. (접속일:2026. 8. 20.).
- 윤종철. (2025. 4. 28.).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빌려주세요" ... 성동공유센터, '물품 대여' 각광. 성동저널.
- 이병구. (2024. 10. 29.). 전 세계 열광 생성형AI의 그늘... "전자 폐기물 수백만 톤 늘어". 동아사이언스.
- 이유진. (2024. 8. 20.). '일회용 사회'에 저항하는 수리 공동체 곰손. 한겨레21.
-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2026).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100대 정책과제.
-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제주도민의 제품 수리 경험과 수리권 인식 조사.
-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제주시새활용센터 2024 활동보고서.
- 제주시새활용센터. (2026). 제주시새활용센터 2025 활동보고서.
-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 한국환경연구원. (2025).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검색일: 2026. 8. 18.).

## 국외 문헌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2025). 5th International Repair Café Conference.

Azul Dahlstrom-Eckman. (2026. 2. 20.). Bay Area's 'Fix-It' Culture Thrives Amid State's Forthcoming Right-to-Repair Law. KQED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2026. 3. 25.). Ein neues Recht auf Reparatur: Gesetzentwurf zur Stärkung von Verbraucherrechten beschlossen.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Klima- und Umweltschutz, Regionen und Wasserwirtschaft. (2025). Geräte-Retter-Prämie - Informationsblatt zur Förderung von Reparaturen für Privatpersonen.

Bundesministerium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Klima- und Umweltschutz, Regionen und Wasserwirtschaft. (2026. 3. 26.). Geräte-Retter-Prämie zeigt Wirkung: Hohe Einlösequote bestätigt Erfolg.

Bundesrat. (2026. 7. 10.). Recht auf Reparatur passiert den Bundesrat.

CALPLRG. (2023. 4. 5.). Community leaders, local groups, and businesses rally for the Right to Repair during free Repair Café.

Colorado General Assembly. (2024. 5. 28.). Consumer Right to Repair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HB24-1121).

Cooperative City Magazine. (2025. 6. 11.). Budapest's First Repair Café: Where Sustainability Meets Community-Building.

Davis Wright Tremaine LLP. (2023. 6. 20.). Electronics Right to Repair: New York and Minnesota.

Deutscher Bundestag. (2026. 6. 25.). Bundestag stimmt „Recht-auf-Reparatur- Richtlinie“ zu.

Duurzaam Capelle. (2024. 3. 18.). De Capellenaar krijgt het voor elkaar: “Wij geven spullen een langer leven”.

EU. (2024). Regulation 2024/1781, Arts. 12-13.

Huglo Lepage Avocats. (2026. 7. 14.). Économie circulaire : trois textes majeurs, un calendrier sous tension.

iFixit. (2015. 10. 9.). Repair Cafés: Fix—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s.

iFixit. (2022. 10. 10.). Stronger Together: iFixit and Repair Cafe Join Forces.

iFixit. (2026. 7. 16.). The Community Repair Hub Is Live: Find a Repair Event Near You!.

iFixit. Guide. (접속일:2026. 8. 20.).

iFixit. Repairability. (접속일:2026. 8. 20.).

iFixit. Store. (접속일:2026. 8. 20.).

Iris Kim. (2025. 3. 10.). Why Consumers Are Fighting for the Right to Repair Their Own Tech. NBCU ACADEMY.

Peter C. Little. (2021). Burning Matters: Life, Labor, and E-Waste Pyropolitics in Ghana. Oxford University Press.

Maddie Stone. (2023. 8. 24.). In a historic about-face, Apple publicly supports right-to-repair bill, Grist.

Sally McGrane. (2012. 5. 8.). An Effort to Bury a Throwaway Culture One Repair at a Time. The New York Times.

Nima Nabizadeh, Dorothea Kolossa, Martin Heckmann. (2020). MyFixit: An Annotated Dataset, Annotation Tool, and Baseline Methods for Information Extraction from Repair Manuals. Proceedings of the 12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2120–2128.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024. 7. 1.). Attorney General James Reminds Consumers It's Easier Than Ever to Get Electronics Repaired.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2026. 7. 3.). Repair Cafés attract 1.5 million visitors every year.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House Rules. (접속일:2026. 8. 20.).

Repair Café International Foundation. RepairMonitor. (접속일:2026. 8. 20.).

Resource Recycling, Inc. (2026. 1. 19.). Colorado expands repair rights as electronics rules take effect.

The Restart Project. (2025). Impact Report 2025.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2024). The Global E-waste Monitor 2024.

U.S. PIRG. (2025). The State of Right to Repair.

U.S. PIRG. (2025. 7. 1.). More than one-quarter of Americans covered by Right to Repair come Jan.

West Contra Cost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uthority(RecycleMore). (2023. 10. 19.). The Right to Repair Law (SB 244) in California Helps the Circular Economy.

The White House. (2025. 8. 1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on Competition.



# 2026 제주형 수리권 제도화 연구

---

|      |                                    |
|------|------------------------------------|
| 발행기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발행일  | 2026년 9월                           |
| 발행인  | 강호진                                |
| 디자인  | (주)디오워드                            |
| 문의   | 064-722-4843 / jejusen@jejuhub.org |